

인신위 토론회, 포털의 폐쇄적 검색제휴 개선해야

엄격한 기준 마련하고 심사기능 강화해야

포털과 인터넷신문 간의 뉴스검색제휴를 제3의 독립적인 외부 위원회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업계의 공감을 얻고 있다. 포털서비스가 모두가 이용하는 공적 포털의 성격이 강한만큼, 사회적 역할이 큰 인터넷뉴스의 유통을 사적기업인 포털에게만 맡길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지난 4월 30일, 인터넷신문위원회(이하 인신위)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인터넷신문 자율규제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나선 하주용 인하대 교수는 “인터넷뉴스를 포털의 자율성에 맡겨둔 결과, 뉴스의 연성화·연예화가 심각해졌고 장기적으로 뉴스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 교수는 “포털의 뉴스 ‘아웃링크(Out link) 방식이 뉴스 미디어의 광고수익을 증대시킨 결과 저널리즘 산업의 위기를 일정 부분 해소했지만, 언론사들이 뉴스의 본질적 가치보다 유통과 소비 측면에 집중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포털이 매체사 수익 개선에는 기여했지만, 기사·보도의 질적 가치는 하락했다는 평가다.

검색제휴 심사 외부 위탁하고 자율규제 역할 강화해야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 동안 폐쇄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인터넷신문 검색제휴 심사기능을, 공정하고 독립적인 외부 위원회에 위탁하고 인신위가 주관하는 인터넷신문 자율규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교수는 “자율규제에 참여하는 매체에게는 그린마크 외에도 검색제휴 우선권, 정부광고 배정 등의 실효성 있는 혜택을 주어, 우수 매체는 적극 지원하고 문제 매체는 제재함으로써 저널리즘의 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김동현 프라임경제 편집국장은 현업에서 바라본 인터넷언론의 자정노력과 포털의 역할을 지적

해 관심을 모았다. 김 국장은 “과거 많은 매체들이 방문자 수라는 유혹에 못 이겨 낚시성 기사를 계속 재생산하는 어뷰징에 매달렸을 때, 오히려 네이버는 편집권을 언론에게 넘겨주는 ‘뉴스캐스트 시스템’을 도입해 어뷰징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그 결과 뉴스스탠드를 도입하고 클러스터 제도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알고리즘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현재 클러스터링에서도 자극적인 연성뉴스가 자주 검색되는 키워드 저널리즘 경향이 보인다. 네이버는 알고리즘을 공개하는 것은 어려울지라도 클러스터링 운영에 대해 외부의 참여와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신문의 자율규제가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율규제기구에 일정한 권한이 있어야 한다”며 “(인터넷 뉴스 관련) 일정 수 이상의 운영 주체나 사업자가 규제 대상에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자율규제에 실효성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은 “소비자들이 뉴스를 볼 때 광고인지, 정보인지 헷갈릴 정도로 뉴스의 경계가 모호해져 가고 있다”며 “소비자 스스로 좋은 뉴스를 읽는 힘을 키우고 비윤리적인 인터넷신문은 살아남을 수 없게끔 소비자 파위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최수진 국민대 교수는 “인터넷 뉴스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다 근본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소스에 대한 신뢰도를 부각시킬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오늘날 인터넷 공간에서는 뉴스가 ‘기사’단위로 소비되어 독자가 언론사를 확인하지 않는다”며 소스(언론사)가 어디인지 부각되는 환경이 조성되면 어뷰징 등이 감소하고 저널리즘 윤리를 준수하는 언론사의 인지도 및 신뢰도 상승이 기대 된다”고 발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K A A**

이명진 기자 soziro01@nate.com